

이승준 연구위원

## 요약

UN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를 마치며 발표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가국 모두의 진전된 의지를 확인해 주었음.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각국의 정책적 전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도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UN 기후변화협약(UNFCCC<sup>1)</sup>) 제26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6'라 함)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sup>2)</sup>까지 2주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짐
  - 이번 COP26의 4대 핵심 어젠다는 2050 탄소중립과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1.5°C 제한, 지역사회 및 자연서식지 보호,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확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임
  - 지난 8월 발표된 IPCC<sup>3)</sup>의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알려주었음
- 금번 COP26에서 참여국 간 격론 끝에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2015년 파리협정을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선진국 중심으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모든 나라에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5% 이상 줄이고 세기 중반<sup>4)</sup>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촉구함
    -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차원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석탄산업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에 합의함<sup>5)</sup>
    -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sup>6)</sup>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삼림

1)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2) 11월 12일까지 예정되었던 총회 일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주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어렵게 합의문 채택 후 13일 늦은 밤에서야 총회를 마침

3)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4)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참가국 간 이견으로 인하여 2050년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20세기 중반으로 표현하게 되었음

5)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 등의 강력한 의견 개진에 따라 퇴출(phase out)이 아닌 감축(phase down)으로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화석연료 중 석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이를 감축하기로 국제적 합의에 이른 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음

6) 우리나라 포함 105개 국가가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동참함

의 파괴를 중단<sup>7)</sup>하기로 합의함

- 모든 국가는 2022년 COP27까지 현행 2030 국가별 탄소감축목표(NDC<sup>8)</sup>)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진전 상황을 제출하며 이를 2023년 COP28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논의하기로 함
  -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 지침에 합의하고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각국이 탄소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결하였음
    - NDC 및 기타목적<sup>9)</sup>으로 허가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 및 사용 시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청정개발체제<sup>10)</sup> 아래 감축실적 등에 대한 상응조정 방법 등에 합의함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 및 청소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청년주도기후포럼(Youth-led Climate Forum)을 조직하고 개최하도록 요청함
  -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하여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금조성<sup>11)</sup>을 위하여 2025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함
- 우리 정부도 이번 COP26에 참여하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였음
- 우리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발표

일시	탄소중립 관련 발표	주요 내용
2020. 10	2050 탄소중립 선언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2020. 12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2021. 5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2021. 8. 31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시
2021. 10. 2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탄소배출을 2030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자료: 관계기관 합동 및 환경부 보도자료

- 이번 COP26의 기후변화 정책합의에 따라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 및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임

7) 전 세계 숲 면적의 90.1%를 차지하는 141개 나라가 동참함

8)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9) NDC 목적 밖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

10)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임

11) 2009년 COP15(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지원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민간 및 공공기금 1,000달러를 매년 기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COP26에서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

-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탄소배출국은 모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별로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번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하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sup>12)</sup>(〈표 2〉 참조)
  - 특히 유럽 의회는 이미 지난 6월 유럽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최초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음
-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재가입 등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하원 의회도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1.85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책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친환경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조 원 이상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sup>13)</sup>하였음

〈표 2〉 주요국 탄소중립 계획 및 2030년까지 감축 목표

탄소중립 달성 연도	국가	2030년까지 국가별 감축 목표
세기 중반	글래스고 기후합의	1.5°C 달성을 위해 2010년 대비 45% 감축 필요
2050	EU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미국(2020)	2005년 대비 50~52% 감축
	캐나다(2021)	2005년 대비 40~45% 감축
	일본(2021)	2013년 대비 46% 감축
2060	중국(2021)	2005년 대비 65% 감축
2060	러시아(2020)	2010년 대비 30% 감축
2070	인도	-

주: (연도)는 UNFCCC에 게시된 최신 NDC 제출 연도임  
 자료: UN 기후변화협약, EU fit for 55, COP26

- 향후 우리나라 포함 각국의 기후 관련 정책변화가 보다 가시화되면 이에 따르는 보험회사의 ESG 경영 필요성도 제고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기업경영의 패러다임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 중 환경 요소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 평가기관인 A.M. Best의 2020년 특별보고서<sup>14)</sup>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을 통하여 ESG 확산에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며 ESG 경영이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분산시키는 고유의 업무(보험인수)와 이 과정에서 모아진 책임준비금 등을 투자(자산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가계와 기업 등 시장참여자에게 보험료라는 시장가격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유인제공과 자산운용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투자가 가능하므로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통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기여가 가능함

12)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별 탄소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제출하고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이를 모니터링 함

1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14) A.M. Best(2020), “Insurers and Reinsurers: Ignoring ESG Factors Poses Reputational Risk”, Best’s Special Report

- 예를 들어, COP26을 통해 각국이 감축하기로 합의한 석탄산업 등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와 투자를 줄여나가며 환경 관련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특히 장기투자에 최적화 되어있는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 및 금융의 수요를 보험산업의 기회요인으로 만들 필요도 있음
  - 우리 정부도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하여 지급여력 제도상의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금융시장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이룬 비재무적 성과를 ESG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충실하게 전달하여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
  - ESG 공시는 기업 활동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며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재무공시와 함께 기업에 대한 시장규율을 재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